39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과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과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01 남영동의 고민 :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시민들이 자신 스스로를 '주권자'로 호명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새로운 사회의 과제를 제시한 '촛불 혁명' 이후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소위 보수 정권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민주화의 경험과 과정, 의미를 전승하고 민주화운동의 위상과 민주주의에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상징하는 민주화기념관 건립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지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록·기념하는 기념관을 넘어 국내외 민주주의 학술연구 및 교류의 장이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 센터'로 구상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실현되지 못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촛불의 힘에 대통령의 의지 등이 더해져서 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남영동 기념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둘째, 소위 '테니스장' 논쟁으로 대표된 유휴부지의 활용 여부이다. 다행히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옥을 짓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헐어버리려 한다거나 건물을 훼손하려 한다는 허황한 소문은 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인 유휴부지에 대한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테니스장은 악의 일상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며, 남영동의 모든 공간과 시설물들이 장소성을 갖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포함한 유휴부지의 활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의 주요 내용은 장소성에 기인하여 국가폭력 관련 피해와 가해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축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도로 지하 공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와 국가폭력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와 소통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시민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본관과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하되 유휴공간을 활용해 현재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전시, 시민교육, 치유 및 참여 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1]

1)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팀(연구책임자 정근식)의 주관하에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한 공론토론이 2019년 7월 13일 진행되었다. 공론토론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30명과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40명 총 100명이 참가했다.

두 가지 쟁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부지 활용' 여부가 논의 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민주인권기념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기념관에 담아야 할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조사 작업 등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고 있는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진행 상황은 남영동 자체가 갖는 공간의 무게와 건물 형식이 곧 내용 드러내 주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건축학적 특징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대로 된 기념관 부재와 민주화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과 같은 민주화운동 기념 기반의 취약성이 더욱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이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상징하고, 민주인권기념관의 내용과 운영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드러내 준다 할 때, 유휴부지 활용에 치우친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2]

지금까지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관련 논의들은 주로 '테니스장의 가치'로 대표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소위 역사적·건축학적, 당사자적·피해자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시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 한국 사회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와 피해의 공간으로서 남영동의 자기 제한적 기념을 넘어 민주화의 상징이자 세대 간 역사의 징검다리로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을 조망해야 한다. 촛불의 연장 선상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촛불을 잇고, 촛불을 미래의 민주주의와 연결해주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의 토대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민주인권기념관이 요구받고 있고, 또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영동 대공분실과 관련한 논쟁은 남영동의 주어진 '장소성'을 넘어 장소성에 대한 확장과 재전유를 포함하여 그간의 역사적·건축적, 당사자적 접근에 사회과학적이고 보편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더해져야 한다.

2)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은 한국 역사상 유례없었던 촛불의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 촛불의 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내놓아야 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지는 못했다. 국가폭력의 공간이었던 남영동을 경찰로부터 이관받는 법률적·행정적, 타협적·절충적 과정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이관 이후 남영동에 경계 안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는 용산구청의 요구(현재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 추진), 남영동 주변 미군기지 터의 초고층 건물 신축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미배정, 현 정부의 임기 중에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계획 등은 촛불의 지금의 위상뿐만 아니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이 토대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여실히 들어내 준다.

02 장소성의 확장과 재전유 : 독재의 공간에서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2018년 겨울,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20년 가까이 그곳에 민주화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주화 인사들과 유가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유로 남아있었다. 독재의 폭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촛불 혁명이었다. 정치 권력의 교체를 넘어서 사회 각 분야로 민주주의를 확산하고자 했던 촛불의 힘이 남영동의 육중한 철문을 시민들에게 열도록 강제하였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몇 차례 부지확정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광화문 덕수초 인근 부지의 경우 지역적 중심성과 접근성, 활용성 등에 대해 집중한 나머지 여론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선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의 경우 서울시의 협조로 민주화기념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권의 무관심과 민주화운동기념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들의 국회에 대한 압력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기도 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대상의 포괄성과 추진 주체의 추상성·광범위성, 강력한 응집력과 추진력을 갖는 이해관계 집단의 부재로 인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체와 범위를 갖는 개별 민주화 사건이나 지역에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주체의 모호성과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의 부재로 말미암아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고, 다른 우선순위와 관심사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촛불 혁명 과정에서 '주권자'로 호명된 '민주주의 주체의 등장'은 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의 가장 큰 한계였던 주체의 추상성과 대상의 광범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3]

3) 영화 1987의 흥행에 따른 6월 항쟁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여론의 지지, 남영동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결정적이었다. 시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요구를 외면했고, 경찰은 남영동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다.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촛불의 요구에 부응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이것은 '촛불 시민'이라는 주체가 다시 추상적 주체로 돌아가거나 대통령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 부지로 확정되면서 남영동은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장소성이 재구성된다. 그 공간은 이제 독재를 위해 복무하거나 그것에 대한 부역을 은폐·미화하는 '가해자'의 시설과 공간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반인권적 폭압을 증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방어하고, 세대간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전승하며, 미래의 민주주의를 그리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것이다.[4]

남영동 대공분실은 비단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이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의 극단적 폭압에 대항한 목숨을 건 저항의 공간이었다. 독재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가장 극단적이고 치열한 쟁투의 장이자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남영동에 민주화기념관건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그 성격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이것은 국가폭력의 공간으로서 남영동의 장소성에 기인하여 인권이란 가치가 중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우선 남영동은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의 국가폭력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화 투쟁의 공간이었다.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은 많은 민주인사는 단순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군부정권에 저항한 민주투사였다. 민주항쟁을 촉발한 남영동에서의 폭력과 저항의 의미는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가 간첩 사실을 자백했다는 당시 중정 발표가 거짓"임을 지적하면서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특히 최 교수의 경우 사망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유신반대 등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점을 감안해 보면 최 교수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신장시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프레시안 2002.5.27.)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공간이자 국가폭력의 공간으로서 남영동은 과거사 기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먼저 민주와 인권, 양자의

4) 임시로 운영 중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은 정문의 육중한 철문을 지나 건물 뒤편의 작은 문을 통해 5층 조사실로 연결된 길고 좁은 원형 계단을 오른다. 늘어서 있는 5층 조사실과 좁은 창문이 주는 단절과 압박 속에서 원형이 보존된 509호실과 아버지의 서재를 주제로 꾸며진 515호 등 조사실 등을 살펴보고 4층의 박종철 기념관으로 내려가 80년대 사회상과 민주화운동 역사를 접한다. 남영동을 나서며 '고맙다.' '고생이 많다'라는 시민들의 인사는 남영동을 대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고 있다.

결합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만, 연결이 금기시되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다룰 수 없었던 민간인 간첩 조작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녹화사업과 같은 또 다른 국가폭력의 사건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문사 사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 대상에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민주화운동의 기념 대상이 정의됨으로써 독재연장과 민주화 억압을 위해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민주화와는 분리된 인권의 문제로만 다루어져 왔다. 남영동에 건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 억압의 수단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자행된 반 인권적 국가폭력과 저항으로써 민주화운동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민주와 인권의 결합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비극적 숭고의 장소"가 아닌 "기득권력의 차라리 희극적 광기에 의해 민주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부정되었던 현장"(김명인 2019)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게 해준다. 인권의 문제는 과거 민주화 세력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하는 민주화나 민주주의와 다르게 보편성을 갖는다. "이 장소가 돌과 나무로 만든 또 하나의 화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새로운 형태의 기득권과 광기에 의해 기본적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소수자-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빈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난민,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는 역동적 공간으로 설계되고 건립되어야 한다"(김명인 2019)는 주장에서와같이 민주와 인권의 결합은 민주인권기념관을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민주인권의 문제와 조우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영동이라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장소성은 과거 가해자들 행위의 재현과 같은 제한적 방식을 넘어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재전유 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03 대표적 민주인권기념관으로서의 역사적·사회적 책무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역사와 희생자, 가해자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및 역사기념박물관의 역할, 민주주의와 국가폭력의 역사교육시설의 역할,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 및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역할, 현재 민주주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매개하는 공론장의 역할, 세대 간 역사적 경험의 전수와 소통의 공간, 민주화·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센터의 역할, 민주주의의 지속발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 민주주의 세대를 양성의 역할, 향후 지역에 건립된 민주주의 관련 기념시설의 센터이자 허브의 역할 등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5]

남영동 대공분실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상징하는 대표적 민주인권기념관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 자체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면서 국가폭력의 대표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이 되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공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남영동에 건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정부의 모든 민주화 관련 '민원'을 집결시킬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장차 전국 곳곳에 조용하고 아담하게 건립될 수많은 민주인권기념관의 중심이자 허브의 역할"(김동춘 2019)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표적 민주인권기념관으로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역할은 민주화운동 폄훼와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민주주의 관련 시설과 기관들의 센터로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 역사 왜곡과 폄훼를 막는 보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6] 가해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와 기록,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를 드러내는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역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역사 왜곡과 증거인멸 등으로

5) 역사기념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동기 2019, 민주인권기념관의 센터이자 허브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동춘 2019, 시민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6월 민주항쟁 32주년 대통령 기념사를 참조.

6) 민주화운동의 왜곡 폄훼, 참여자에 대한 조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분별하게 확산, 주입됨으로써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동안 민주화 역사와 가해에 대한 불철저한 기록과 정치적 봉합의 반복 속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한 건립이 번번이 좌절되는 와중에 심지어는 가해로서 독재정권이 민주화의 주체로 탈바꿈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영제 2019)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2차 가해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여기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국가폭력의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이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해세력의 역사적 장소 훼손과 역사 지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수립하고(이영제 2019),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고 통제했던 다른 국가폭력 시설도 남영동의 뒤를 이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 연구, 교육, 아카이빙 등 기념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념관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사건과 역사, 인물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민주주의 발전에서 그것의 기여와 역할을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나 늘어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와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은 오히려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과거의 민주항쟁과 촛불을, 그리고 촛불과 미래 민주주의를 잇는 세대 간 징검다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19혁명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났고, 6월 항쟁만 해도 30년을 훌쩍 넘어선다. 이제 아무런 매개체 없이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의 세대로 전승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함께 잊혀 수명을 다한 것 같은 87년 6월 항쟁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시민이 참여한 촛불을 계기로 다시 역사에 등장했다. 6월 항쟁과 촛불 혁명은 많은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7] 항쟁과 혁명 같은 대규모의 분출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가 민주혁명이나 민주항쟁에의 참여를 통해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화의 경험이 약 30년 뒤 촛불 혁명으로 전승되었다면 이제 그 촛불의 징검다리 기능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이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속한다.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역사의 기록과 전승의 역할은 단지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기록과 전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카이빙, 연구,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민주인권기념관은 현재의 다양한 민주인권의 문제들과 연대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형태의 민주인권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화되면서 공감을 형성하게 된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투영되는

7) 동시에 6월 항쟁의 완성으로서 촛불 혁명은 6월항쟁에서와 같은 결과의 반복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두 가지 방식 있다. 하나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역사적 상황' 내지 과거 문제의 반복에 따른 공감의 형성이다. 예를 들면 미흡한 친일잔재 청산에 따른 역사 왜곡의 반복에 대한 공분이 식민지 역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개혁의 지체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가 민주화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현재의 민주인권의 문제는 과거 문제의 연속선에 있고 민주인권기념관은 그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른 각자 또는 집단이 개별적 사고와 경험에 비추어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현대판 노예제, '5·18은 세월호'[8] 와 같은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세월호를 통해 5·18을 이해하고, 5·18은 세월호와 연대함으로써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도 자신의 역사를 특수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화함으로써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탈출할 수 없었던 남영동 5층 조사실의 좁은 창문에서 세월호의 창문을 발견할 수 있다. 극단적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게 했던 남영동 전철 소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들어가는 비정규직 청년이 들었던 지하철 소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영동의 테니스장이 악의 평범성을 넘어선 일상성을 보여준다면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로 지탱되는 이 사회는 악의 일상성을 넘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발생하고 있다는 악의 보편성을 드러내준다. 이처럼 현재 민주인권의 문제를 통해 이해·공감되거나 현재화되지 못한 민주인권은 그저 구경의 대상인 과거의 전시물일 뿐이다.

8) 6월 항쟁 32주년 토론회에서 한 청년 토론자는 요즘 세대에게 5·18은 세월호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고 이야기하였다.

04 민주인권기념관의 과제 : 미흡한 민주화 기념 기반 극복과 다층적 기념의 망 구축

1) 불명확한 기념 대상 : 법·제도 정비와 민주화운동 연구성과 체계화의 시급성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과정에는 예산과 인력확보, 공간 배치, 사료수집, 시간의 촉박함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민주인권기념관이 자신의 기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그 기념의 대상을 객관적 사료에 근거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선별해야 한다. 우선 민주인권기념관이 담아야 하는 사건, 단체, 인물 등을 선정한 후 규모와 역사적 의미, 상징성과 영향력 등에 따라 선별, 분류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이 미흡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 사법 농단 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기념 대상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념 대상 선정과정에 발생하는 논쟁과 갈등이 기념 대상 포함 여부를 다툰다는 의미에서 외적 논쟁이라면, 기념 대상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선별 과정은 내적 논쟁에 해당한다. 외적 논쟁과 내적 논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기념의 대상을 선정하고 선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법·제도의 정비와 그것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연구성과의 체계적 축적은 민주인권기념관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우선 기념 대상에 관한 법·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기념 대상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물론 왜곡과 폄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적 차원에서 기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같은 법에 제2조 제2항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③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②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민주화운동, ③제1호 및 제2호 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이 그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역사적 정립과 그에 따른 기념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의 희생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보상위에서 심의·결정의 대상이 되는 그 시기를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범위를 희생자와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의·결정을 하는 신청자 주의, 자기 입증의 원칙, 신청 기간의 제한 등에 따라 중요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나 인사들을 기념의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이에 비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법률의 목적상 기념의 대상이 되는 민주화운동을 보다 적합하게 정의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서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과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를 포괄하고 이외 활동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9) 현재 3.17 성남고 시위(서울민주의거)와 5·3 사건(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10) 이 문제는 민보상위가 발간한 『민주화운동 백서』에서 잘 드러난다. 6·10민주항쟁은 국가기념식이 진행되는 중요한 민주화운동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따라 그 기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수준에서 6·10 민주항쟁 관련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73건에 불과하다. 6월 항쟁은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 참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건으로 6월 26일 진행된 '국민평화대행진'의 경우 전국 37개 도시 269곳에서 국본 추산 130만 명, 경찰추산 5만8천 명이 참석한, 촛불시위 이전 최대의 전국적 시위였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3,467명, 서울에서만 2,139명이 연행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2017, 241) 그러나 『민주화운동 백서』에 따르면, 6월 항쟁 관련 156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인정된 것은 73건, 불인정은 83건이었다. 불인정건 다수는 보상건 및 불기소, 수배, 훈방 등 민주화보상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된 사례들이다. 신청인들의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 53건, 광주 39건, 부산 23건, 대구 10건, 대전 3건, 인천 1건, 울산 1건, 강원2건, 경기 4건, 경남 6건, 경북 1건, 전남 4건, 전북 6건, 충북 2건, 제주 2건이다. (『민주화운동 백서』, 177)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고시된 민주화운동의 사례가 없고,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항에 머무르고 있다.(이영제 2017)

민보상위 활동 종료 이후 국가적 수준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및 명예회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상설적 제도였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원회'의 해산으로 추가 인정이 사실상 봉쇄되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관련 사건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민주화운동을 기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하거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파편적 기념 기반의 마련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조망을 어렵게 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강력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민주화운동기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향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담겨 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화보상법」과 그에 기초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사건보다는 인물 중심, 피해·희생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사건 중심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원회'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운영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스스로 그 기념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 과정을 거쳐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스스로 기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근거는 민주인권기념관이 스스로 자신의 기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권한'과 관련되어 있다면, 연구조사와 그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그러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기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다층적·다차원적 기념·계승의 망 구축

그동안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시급성과 민주화 기념에 대한 낮은 합의수준, 현실 민주주의의 후퇴, 민주화 세력의 일반의지를 대표할 세력의 부재 등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 기념이 어려웠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강력한 물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기념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성찰적인 시각에서 기념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의 정책은 희생자와 피해자 중심의 한시적 보상과

명예회복이라는 소극적 기념사업에 국한되었다.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개념은 개인으로서 희생자,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참여자와 단체보다는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은 희생자, 피해자의 역사를 넘어선 국민적 참여와 성취의 역사이며, 그 참여와 성취에 대한 평가는 피해 또는 성취 정도와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다.

특히 역사상 유례없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한 촛불 혁명은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계승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4·19, 5·18, 부마항쟁 등 기존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은 희생자나 피해자, 참여자들이 특정되거나 시공간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소위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촛불 혁명은 그 참여자나 관련자가 국민 대부분이 해당할 만큼 포괄적이다. 즉, 국민 다수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민 다수의 민주화운동 참여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촛불 집회는 참가의 규모나 민주적 성취에 있어 기존의 민주항쟁이나 혁명과 견줄 만하지만, 그 직접적인 희생자나 주도자(지도부 또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계승의 패러다임으로는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촛불 혁명 이후 기념·계승은 희생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수준에서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성취에 대한 집합적 보상이 더해진 다층적·다차원 수준에서의 기념계승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 1〉의 예에서와같이 희생자, 피해자, 유공자, 참여자를 한축으로 하고를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의 기념계승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기념계승사업의 망이 필요하다.

〈표1〉 다층적, 다차원적 기념계승 예시

<table>
<tr><th>구분</th><th>공통</th><th>희생자</th><th>피해자</th><th>유공자</th><th>참여자</th></tr>
<tr><td>개인</td><td rowspan="2">·명예와 예우
·기념과 기록
·연구조사</td><td>배·보상</td><td>배·보상, 치유</td><td>포상</td><td>참여인정</td></tr>
<tr><td>집단/집합</td><td>추모 공원</td><td>병원 /
치유 센터</td><td colspan="2">아카이빙, 기념관, 시민교육</td></tr>
</table>

그 방향은 우선 기존의 피해자·희생자 중심, 선별적, 제한적, 소극적 기념·계승에서 다수 참여자를 포괄하는 상시적이고, 체계적, 유연적, 참여적, 통합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 기념·계승으로 발전해야 한다. 적극적 기념·계승은 민주화보상법의 피해자·희생자 중심적 접근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소극적 해석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적인 연구조사와 그에 기초한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과 추모·치유센터 건립, 참여자 인증과 기록 등을 포함하여 집합적 보상과 예우로써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으로써 민주시민교육과 국제 민주주의 교류 활성화 등을 포괄한다.

다양한 대상, 규모, 의미, 지역, 과제, 시기를 아우르는 다층적, 다차원적 기념· 계승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기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민주화운동 자료와 연구의 집대성과 그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념 대상 선정(인증)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기념 대상의 선정과 선별에 대한 객관성의 부족은 또 다른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라는 2차 가해의 단서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시민교육이나 국제교류 등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05 기념관이 아닌 튼실한 민주인권의 기반을 만드는 것 : 강한 민주화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장기간 지속된 한국 민주화운동에 촛불의 힘이 더해져서야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민주인권기념관이 갖는 물질적,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건립되지 못한 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 주고 있다.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인 기념관은 아니다. 향후 건립될 다양한 민주인권관련 기념시설 등과 연계망 속에서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무엇보다 민주화·국가폭력 희생자·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의 장이자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의 장이자 참여에 대한 자긍심의 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인권기념관이 다양한 민주인권 관련 기념시설의 센터이자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인권기념관은 기념 대상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사료 정리와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을 체계적으로 진행·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본적 연구와 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우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퇴행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대비해 또 다른 항쟁을 준비하는 저항의 공간이 아니라 퇴행을 방어하는 튼실한 민주인권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민주화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시대 즉, '강한 민주화 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 시대로의 변화를 이끄는 민주인권기념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인권기념관은 기념계승의 강력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1]

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는 국가폭력의 공간인 남영동을 세계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해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진행하고

남영동의 '아우라'는 비단 물질적 공간으로서 남영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영동의 진정한 아우라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정당성'의 원천을 제공해준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정치체제나 국가폭력의 중심으로 한 민주·인권은 젠더, 소수자, 어린이, 환경, 사회경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의 다양한 민주인권의 과제들과 연대하지 않는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인권기념관이 아닌 과거를 담은 하나의 '전시물'에 불과할 것이다.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인권의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스스로 온전한 토대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춘. 2019. "'경제성장'과 달리 애써 노력해야 보이는 '민주화'-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자체가 민주주의 시험대". 오마이뉴스(검색 2019. 7. 9)

김명인. 2019. "'희극'으로 기억에 남아야 할 남영동 고문실". 오마이뉴스.검색 (2019. 7.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15.『민주화운동 백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엮음. 2017.『6월 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이동기. 2019.「'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구상: 10개의 테제」.『기억과 전망』40호.

이영제. 2019.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왜 지속되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 39주기 리포트.

_____. 2017.「민주화운동 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프레시안. "최종길 교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 2002.5.27. http://www.pressian.com/ezview/article_main.html?no=70089검색 (2019. 7. 5)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의미와 과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7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07
ISSN 2508-3244